

여름 전기사용 자제를

- 최중경 장관, 9개 유관기관장 배석 對국민 담화문 발표
- 실내 냉방온도 26℃이상 유지 등 5개 실천항목 제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여름철 전력소비 자제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특히 폭염이 지속될 경우 전력수급 여력이 비상태세에 들어가는 400kW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 전력 피크시간대 에어컨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최 장관은 지난달 22일 지경부 브리핑룸에서 한전 김쌍수 사장, 한수원 김중신 사장, 남동발전 장동수 사장, 중부발전 남인석 사장, 전력거래소 염명천 이사장 등 9개 유관기관장이 배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 대비 전력 공급 예비량을 420만kW 확보하고 있으나, 예상을 웃도는 이상고온이 지속될 경우에는 400만kW 이하까지 예비량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또 국민들의



'범국민 에너지 절약 5개 실천항목'을 제시, 전국민 실천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5개 실천항목은 ▲실내 냉방온도를 26℃ 이상 유지하기 ▲전력 피크시간대에 냉방기 사용 줄이기 ▲자동차 5부제 적극 실천하기 ▲대중 교통 가급적 많이 이용하기 ▲대규모 옥외 야간 조명 끄기 등이다.

정부는 수요 급증에 대비해 지난해 하계이후 포스코 복합발전 5, 6호기(115만kW) 등 8개 발전소를 증설, 총 463만kW의 공급력을 추가 확보하고, 최대 피크 수요 관리 등 다양한 수급 안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전력피크기간(8월 2~4주, 오전 11시~12시) 산업체 휴가를 유도하고, 조업시간 조정 등의 수요관리를 통해 당초 목표 300만kW를 350만kW(50만 kW ↑)로 확대해 전력 예비율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다소비 건물 478개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냉방온도 제한제(시행기간 7월 11일 ~ 8월 27일)'의 실효성 극대화를 위해 실태 점검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 2020년까지 30% 줄인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 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배출 전망치 대비 18.2% 줄이기로 했다. 배출 전망치(BAU·Business as usual)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별도로 실행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배출량을

말한다. 또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34.3%, 건물 부문에서는 26.9%를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확정했다. 국가 전체로는 이산화탄소로 환산해 2020년 8억1300만에서 30%를 줄여 5억6910만t을 배출하기로 했다.

부문별로 보면 산업 부문의 시멘트 업종은 BAU 대비 8.5%, 기계 업종은 7.9% 감축하도록 했고, 전기·전자 업종은 에너지 소비를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7.9% 줄이도록 했다.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도 에어컨·냉장고 등에 사용되는 냉매나 불소계 세척제 등 비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83.9%를 줄이도록 했다.

또 전자표시장치(디스플레이) 업종은 39.5%, 반도체 업종은 27.7%를 감축하도록 했다. 자동차 업종도 에너지 분야와 비에너지 분야로 나눠 에너지 분야는 7.8%, 비에너지 분야에서는 90%를 줄이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바탕으로 오는 9월까지 포스코와 현대자동차 등 47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별로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할당하는 등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단위 CO₂t)

구 분	배출전망치	감축량	감축률(%)
산 업	4억5518만	8249만	18.2
수 송	1억725만	3682만	34.3
건 물	1억7896만	4806만	26.9
공공·기타	1885만	470만	24.9
농림·어업	2910만	152만	5.2
폐기물	1383만	171만	12.4
발 전	2억5500만	6820만	26.7
탈루배출량	983만	-	-
총 계	8억1300만	2억4395만	30.0

자료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미 스마트그리드 국제표준 논의 '손잡아'

- LOI 체결... 민간차원 국제표준협력 기반 마련
- 공동위 구성, 각 협력분야별 결과물 도출 목표

우리나라와 미국이 스마트그리드 국제표준 개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 스마트그리드 표준화포럼(의장 박종근)은 미국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패널(SGIP)과 스마트그리드 국제표준의 상호운용성 표준에 대한 협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스마트그리드 표준화포럼은 최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진행된 SGIP 총회에서 한·미 간 스마트그리드 국제표준 협력을 위한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존 맥도널드(John McDonald) SGIP 의장과 박종근 한국스마트그리드 표준화포럼 의장을 비롯해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와 미국은 앞으로 스마트그리드 구조(Architecture)와 개념 모델, 이용사례(Use Case) 공유,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과 기술,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표준 시험과 인증 등의 분야에서 힘을 모으게 된다.

아울러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포럼과 SGIP는 스마트그리드 표준관련 주요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양국 간 컨퍼런스·워크숍·세미나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아닌 민간차원에서의 스마트그리드 국제 표준 협력의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포럼 관계자는 설명했다.

양국은 의향서에서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한·미 스마트그리드 협력을 이끌 '공동 위원회(Joint Committee)'를 구성, 이를 통해 각 표준 협력분야별로 목표와 절차, 일정 등을 논의하고 세부적인 협력결과물을 도출해 낼 방침이다.

양국 공동위원회 대표로는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가, 미국에선 에너넥스(Enernex)사가 선정됐다.

RPS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거래 계약·현물로 구분해 운영

내년부터 시행되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이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으로 구분돼 운영된다.

또 현물시장의 매매체결방식은 앞으로 6개월간 경매 방식과 양방향입찰방식으로 모의 운영한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달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RPS 세부운영규칙을 제정·공고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또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민간 태양광발전사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RPS시범사업자 선정과 같은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냈다.

앞으로 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 쌍방이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시장의 경우 연중 개설되며, 시장을 통해 공급인증서가 거래되는 현물시장은 매월 하루 개설된다.

아직 경매방식으로 할지 양방향입찰방식으로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경매방식의 경우 REC를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경매개시 전일부터 당일 개장시간 10분 전인 9시 50분까지 매도주문하고, 시장에서 경매개시 가격대별로 주문 정리하면 매도물건당 최고입찰가격을 제시한 매수자들에게 REC가 낙찰될 전망이다. 양방향입찰방식은 기존의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거래된다. 거래수수료는 매도자, 매수자 모두 REC당 50원이다.

다만 태양광의 경우 기존 RPS 시범사업방식을 준용해 운영한다. 시행 첫해인 내년의 태양광 REC입찰물량은 총 32.3MW이다.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에 대한 13개 공급 의무자 중 4개 기관이 공급인증기관인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총 32.3MW를 선정 의뢰했다. 한수원이 가장 많은 21MW를 의뢰했고, 남동발전 4.3MW, 중부발전 4MW, 서부발전 3MW 등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10일부터 17일까지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서를 접수하고, 이달 말까지 판매사업자 선정 및 공급의무자에 대한 배분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전기료 평균 4.9% 인상

• 주택용은 2%... 대기업 산업용은 6.3%

지난 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9% 인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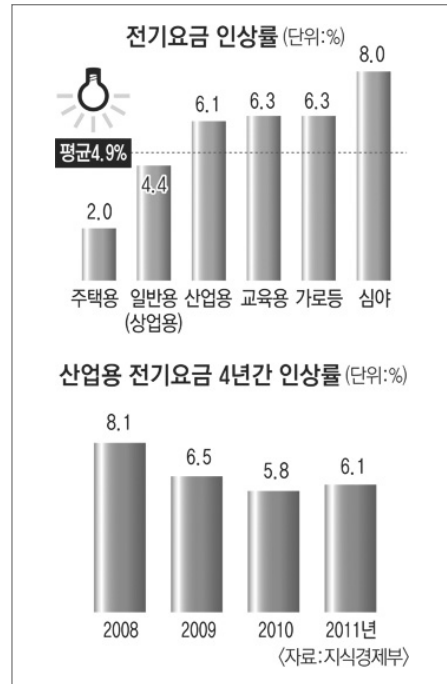
주택용 전기료는 평균 2%로 소폭 올리고, 농어업용과 전통시장 영세상인용 요금은 올리지 않고 동결했다.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 저압 요금은 2.3% 소폭 인상하는 대신 대형건물과 대기업이 주로 쓰는 고압 전기료는 각각 6.3%로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

지경부는 현재 전기료가 원가의 86.1%에 불과해 인상 요인이 높지만 생계형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인상부담을 최소화했고,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주택용 전기료도 물가 상승률 전망치의 절반인 2%만 인상하는 대신 대기업과 대형건물은 중폭으로 차등 인상키로 한 것이 이번 전기료 조정안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시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료는 월 평균 800원, 산업용 전기료는 월 평균 28만6000원 증가한다.

전력원가 회수율이 낮은 교육용과 가로등, 심야 요금은 각각 6.3%, 6.3%, 8.0%로 인상폭을 높였다.

월 평균 1350kWh로 전기를 많이 쓰는 약 5000가구 호화 주택에 대해서도 이를 초과한 사용량에 대해 kW당 110원 가량 할증요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골프장 야간조명시설 등에 대해서도 전기요금 중과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요금 조정을 통해 전체 전력사용량의 1.1%, 연간 51억kWh의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액도 연간 6176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전기료 인상에 따라 연간 소비자 물가는 0.038%포인트, 생산자물가는 0.12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KEA